



보도시점

2025. 1. 22.(수) 회의  
엠바고 해제시

배포

2025. 1. 21.(화) 16:00

##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정부 총력 대응

- ▶ 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, 마약류 해외 유입 차단 등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
- ▶ 전주기 관리 강화, 치료·재활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
- ▶ 대국민 홍보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마약 근절 예방기반 강화
- ▶ 청년·수용자·외국인·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

□ 정부는 1월 22일(수) 오전 10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,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('25~'29) 등을 논의하였다.

-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,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,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.

□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,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,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,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,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.

### ①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

□ 첫째,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.

- 우선,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,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.
- 또한,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 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,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,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.
- 온라인 불법거래·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·다크웹 등 1.3만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,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'마약 던지기 수법'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.

- 아울러,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·확대하고,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하여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.
- 둘째,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.
  - 우선, 여행객·화물·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하여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제고한다.
    - \* (여행객) 인공지능을 활용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대상 집중 검사  
(화물) 수증드론·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등 도입·활용  
(국제우편) 전용 세관검사장 구축
  - 또한,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,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·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.
- 셋째,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.
  -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,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·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.
  - 또한,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,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.
  - 아울러 의사 자신에게 처방·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프로포폴을 시작(‘25.2)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,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.
- 넷째,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.
  -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해 표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,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·공고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.
  - 아울러,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·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.

## ②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

- 첫째,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.
  - 우선, <sup>함께</sup>한걸음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지자체 등에서 전화·방문 상담, 익명검사·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, 24시간 핫라인(<sup>8기</sup>한걸음센터)를 통해 상담·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.
  - 또한,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\*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,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,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.  
\* (중증)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/ (경증) 의원급 정신의료기관
  - 아울러, 공동 입소시설인 ‘숙식형 한걸음센터’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하여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둘째,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, 서비스를 내실화한다.
  -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‘한국형 표준진료지침’을 개발·보급(~29년)하는 한편,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\*를 제공하고,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.  
\*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, 적정 수준의 치료수가 보상 검토
  -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,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.
  - 특히,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·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.
- 셋째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.
  -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‘사범-치료-재활 연계모델’을 활성화하여,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·재활 기회를 확대하고,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<sup>함께</sup>한걸음센터와 연계하여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
### ③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

- 첫째,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.
  - 우선, TV·온라인·옥외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, 세계 마약 퇴치의 날(6.26) 전후 1주간 마약류 예방·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.
  - 또한,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료·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이 포함된 ‘마약류 예방 서포터즈’를 운영한다.
- 둘째,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세분화하여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제고한다.
  - 초·중·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,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.
  -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‘마약청정 대한민국’\*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.
    - \*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
  -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 및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.
  - 외국인은 유학·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, 외국인 비전문 취업(E-9) 규모가 큰 조선·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.
- 셋째,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양상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배후기반을 공고화하고, 정책 거버넌스를 재정비한다.
  - 현행 마약류 관련 통계 및 법령 등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·정비를 통해 정책 마련에 있어 현장과의 정합성을 높인다.
  - 아울러, 현재 운영중인 ‘마약류대책협의회’에 부처·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시켜 중앙-지방정부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.

## ④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

- 첫째, 미성년자,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마약류 투약 및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.
  - 우선,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,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·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.
  - 또한,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하여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.
  - 아울러,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권고하고,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·안내한다.
- 둘째,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.
  -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:1 상담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순찰 강화 및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.
  - 아울러, 이온스캐너 등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.
- 셋째, 외국인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.
  -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·변조 검증을 강화하고,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.
  - 또한,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.
- 넷째, 병영 내 마약류 투약·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.
  - 우선,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시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.
  - 또한, 출타·면회 복귀, 택배·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반입 물품을 집중 확인한다.

-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, ‘25년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,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지속 수렴하여,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·개선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	책임자	팀 장	이규배 (044-200-2338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은 (044-200-2889)
<공동>	대검찰청 마약과	책임자	과 장	이태순 (02-3480-428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록 (02-3480-2292)
<공동>	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안찬수 (02-3150-0141)
		담당자	경 정	길민성 (02-3150-2171)
<공동>	관세청 국제조사과	책임자	과 장	최문기 (042-481-7740)
		담당자	사무관	우제국 (042-481-7702)
<공동>	해양경찰청 형사과	책임자	과 장	주용현 (032-835-2058)
		담당자	경 정	박주식 (032-835-2161)
<공동>	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현철 (043-719-2808)
		담당자	사무관	이겨레 (043-719-2802)
<공동>	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연숙 (044-202-3870)
		담당자	사무관	이홍남 (044-202-3871)
<공동>	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	책임자	과 장	이정민 (02-2110-33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기 (02-2110-3788)
<공동>	법무부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	책임자	과 장	김진아 (02-2110-3345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균 (02-2110-3508)
<공동>	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새봄 (044-203-6877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환 (044-203-6547)
<공동>	국방부 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호석 (02-748-6640)
		담당자	중 령	유대성 (02-748-6641)
<공동>	병무청 병역자원판정과	책임자	과 장	정재숙 (042-481-2913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 (042-481-2968)
<공동>	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우석 (02-2110-15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상현 (02-2110-1567)
<공동>	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	책임자	과 장	최혜영 (033-902-5450)
		담당자	연구관	조지영 (033-902-5454)

# 마약으로부터 국민안전을, **철저히** 보호하겠습니다!

비대면 마약범죄 대응 강화	전주기적 관리 강화	대국민 홍보 확대	청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잠입수사 도입</li> <li>▶ 해외 메신저 운영 기업과 수사공조 확대</li> <li>▶ 텔레그램·드립채널 1.3만개 감시</li> <li>▶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중독상태별 치료기관 구분, 맞춤형 치료</li> <li>▶ 치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강화</li> <li>▶ 중증 중독자 재활을 위한 '숙식형 한걸음 센터' 설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국민 장기 캠페인 추진</li> <li>▶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</li> <li>▶ 마약류 예방·퇴치 주간 선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</li> <li>▶ 미성년 투약사범 치료보호 의무화</li> <li>▶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</li> <li>▶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마련</li> </ul>
마약류 해외유입 차단	치료·재활 서비스 내실화	대상별 맞춤 교육	수용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·도별 고위험 여행객 판별</li> <li>▶ 국제우편 세관검사장 신설</li> <li>▶ 현지 공조수사 및 정보협력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중독치료 참여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제공</li> <li>▶ 치료·재활 전문인력 양성</li> <li>▶ 중독상태·약물종류별 맞춤형 재활</li> <li>▶ 재활시 일자리 정보 연계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학교 교육과정·맞는 표준화된 교육 지원</li> <li>▶ '마약청정 대한민국'을 통한 가정 내 교육 지원</li> <li>▶ 군 훈련소·병과학교 입소시 예방교육 실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마약류 퇴치장비 도입 및 검사 강화</li> <li>▶ 교정시설 내 범죄학습 적발시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</li> <li>▶ 교육 이수명령 대상 확대</li> </ul>
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	마약류 사범 관리 강화	정책기반 공고화	외국인·군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빅데이터 활용, 중복·과다처방 집중감시</li> <li>▶ 마약류투약이력확인대상 성분 확대</li> <li>▶ 의료용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투약사범에 대한 사법·치료·재활 연계모델 활성화</li> <li>▶ 보호관찰 대상자 수사·물시 약물 검사 및 전문가 상담 실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현장에 맞게 주기적으로 법령 정비</li> <li>▶ 중앙·지방간 정책연계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마약류 범죄연루 외국인 재입국 규제 강화</li> <li>▶ 외국인 유학생·근로자 예방교육 확대</li> <li>▶ 임영자원 마약류 검사 선제 실시</li> </ul>